지방선거후 정계개편설…국회 공백 장기화?

의장 선출·후반기 원구성 협상 사실상 중단
선거 결과 따라 정기국회 까지 이어질 수도

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, 나아가 그 이후 정계개편설이 나돌면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이 정기국회 직전까지 갈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.

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현재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는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'방탄국회' 공방만 벌이고 있을 뿐 이미 국회법상 시한을 넘긴 국회의장 선출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.

특히 지난 31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각 정당 지도부가 전국 지원유세에 나서면소 국회의장 선출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.

야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의석 분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, 원 구성 협상도 선거 이후에 본격화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. 민주당(118석)과 한국당(113석)의 의석수 차이가 5석에 불과한 데다,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이 이어질 경우 관행적으로 의장을 배출해온 원내 1당이 교체될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는 것이다.

더욱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벌써 나돌고 있다. 이 시나리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다.

우선,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바른정당 출신 의원 중 일부는 한국당으로,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일부는 민주당으로 각각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.

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 일부 보수 성향 의원을 수혈해 세 확대를 꾀할 수 있다.

이 경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. 비록,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압승하더라도 '여소야대'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면 일단 다수당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원내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. 일부 무소속과 바른미래당 의원을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. 나아가 평화당과는 당대당 통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.

또 다른 한편에선 한국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는 물론 친이(친이명박)와 친박(친박근혜) 인사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, 새로운 인물이 구심점으로 자리할 수 있다. 동시에 바른미래당이 의미 있는 지지를 얻으면 보수의 대안세력으로서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

하지만, 야권 전체가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보다는 '헤쳐모여'식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.

그러나 이러한 관측들은 모두 어디까지나 여의도 정치판 호사가들의 이야기들뿐이다. 매번 정당들의 새판짜기 계기가 되는 총선이 오는 2020년에야 치러지기 때문이다.

아울러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방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그보다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나오는 의회협치 구상, 그리고 연정론 같은 의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.

/박지경 기자 jkpark@kwangju.co.kr

"평양행 열차 티켓 받았어요"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플랫폼에서 서울역-평양역(도라산역) 열차 탑승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차창 밖으로 평양행 열차표를 보여주고 있다. /연합뉴스

안철수·김문수, 단일화할까 사전투표 전 8~9일 데드라인

6·13 지방선거가 10여일 남겨놓고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,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.

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변수는 두 사람의 단일화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. 물론 두 사람의 단일화가 승리를 보장하기는 힘들어도 구도차원에서라도 해볼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.

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·안 후보의 단일화 '데드라인'을 사전투표 시작일인 8~9일 직전으로 본다.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돼 단일화 효과가 줄어든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사전투표일마저 넘길 경우 단일화는 하나 마나 한 일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.

양 후보 진영의 분위기를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는 "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"며 "후보들의 결단만 남은 상황"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.

그러나 두 후보가 단일화의 '최종 결심'을 못하고 있는 데다,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.

무엇보다 단일화 방법과 관련, '여론조사 방식'이 한때 검토됐지만, 각론에서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. 아울러 단일화를 할 경우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서울 송파을·노원병 국회의원 재보선 등 다른 선거까지 연동해야 할지, 나아가 지방선거 이후 있을 수 있는 정계개편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할 점도 단일화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.

/박지경 기자 jkpark@kwangju.co.kr

'드루킹 특검' 후보자 4명 압축…문대통령, 이르면 8~9일께 선정

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군이 3일 4명으로 압축됐다.

야 3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이번주 안에 특검이 임명돼 특검 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.

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(회장 김현)는 이날 오후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▲허익범(사법연수원 13기) ▲임정혁(연수원 16기) ▲오광수(연수원 18기) ▲김봉석(연수원 23기) 변호사 등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. 변협은 "수사력과 조직 통솔력, 강직함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선정했다"고 설명했다.

변협은 곧바로 이들의 명단을 야 4당의 3개 교섭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. 이들 교섭단체가 6일까지 후보군 중 2명을 선택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한다. 야 3개 교섭단체는 후보자 압축을 위해 4일 첫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.

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최종 특검 선정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. 지금껏 빠른 수사를 촉구해온 야 3당이 신속하게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고 문 대통령도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특검 선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~9일께 특검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이럴 경우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인원 구성과 시설 확충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 작업에 나선다.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, 파견검사 13명, 특별수사관 35명,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된다.

특검은 이후 ▲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사 행위 ▲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△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▲여러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60일간 수사하게 된다.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 1차례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.

/임동욱 기자 tuim@kwangju.co.kr

6·13 선거현장

광주 구청장 후보

임택 '자치공동체 동구' 공약 발표

임택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는 3일 '시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 동구'를 만들기 위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.

임 후보는 "문재인 정부와 함께 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,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에 대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"며 "'주민이 먼저다'라는 저의 슬로건처럼, 동구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참여 폭을 확장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"고 밝혔다.

또 "주민과 행정 간 의사소통은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,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주민 상호 간, 주민과 행정 간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"고 덧붙였다.

임우진 " 맞춤형 소상공인 서비스 제공"

임우진 무소속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3일 "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겠다"고 말했다.

임 후보는 "1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이 경영컨설팅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사업장을 비우기가 어렵고 젊은층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"면서 "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안내도우미제 등 현장중심의 상담체계를 구축·운영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하겠다"고 강조했다. 또 "중소기업 전화상담 모니터링제를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구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즉시 처리토록 하겠다"고 덧붙였다.

문인 " 옛 광주교도소에 솔로몬로파크"

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는 3일 "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 호남권역을 대표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'솔로몬로파크'를 조성하겠다"고 밝혔다.

문 후보는 "법 연수관, 체험관, 어린이법정교실 등 법 교육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서 심화된 법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민주인권의 성지인 광주의 상징성을 높이고, 그에 걸 맞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한편 체험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"고 강조했다.

문 후보는 공식선거 첫 주말·휴일을 맞아 산악회 출발 인사를 시작으로 교회, 효령복지타운 등지를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.

이은방 " 일신방직 주변 문화예술지구" 조성

이은방 민주평화당 북구청장 후보는 3일 "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과 일신방직 광주공장 주변 정비를 통해 북구의 '문화예술 창조지구'를 만들겠다"고 말했다. 이 후보는 "쇠퇴한 방직산업 유산을 활용하여 '문화예술 창조지구'를 조성하고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스포츠 문화를 접목시켜 도심관광거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"고 강조했다. 또 "민자유치를 통해 근대방직문화유산을 활용한 방직박물관, 방직문화예술 학습공간을 갖춘 '근대산업박물관'을 설립하겠다"면서 "시민예술촌을 조성해 기아챔피언스필드와 일신방직 광주공장 주변을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북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"고 덧붙였다.